

“생중계로 국민께 알려” ‘공개약속’ 된 업무보고

‘내란재판부 설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 마무리

6개월 후 업무보고도 생중계 예정
李 대통령 부처 지시사항 중점 관리
이행 여부 국정평가 주 요인 될 듯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해양수산부 업무보고를 마지막으로 사상 최초 ‘생중계’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 이 대통령이 직접 국정 전반을 점검하며 여러 지시를 내렸는데, 구체적인 정책과 제도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아울러 ‘생중계’ 업무보고는 내년에 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부산 동구 해수부 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머슴이기 때문에 주인이 일을 맡긴 취지에 따라 주인의 이익에 최대한 부합하게 일을 해야 하고 그 과정을 주인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많은 논란에도 업무보고를 생중계로 한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당당하게 일을 잘하면 숨길 필요도 없다”며 “그런 면에서 우리는 국민에게 보고하는 의미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과거엔 업무보고를 형식적으로 했던 것 같다”며 “저는 그런 방식으로 적당히 일 처리 한다든지, 조직의 최고 책임자가 자리 갖고 있는 본질적 책임과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것을 눈뜨고 못 봐주겠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후속 업무보고와 관련해서는 “6개월 후 업무보고는 또 다른 방식으로 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예상된 방향으로 하면 잘 안된다. 우리는 예상 문제가 잘 안 통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자기 하던 일을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고 최소한 파악하고 자기가 책임지면 되는 것”이라며 “6개월 후에 기대해 보겠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공직 사회가 어떻게 변해 있을지 한번 기다려 봐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8일 지방시대위원회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11~12일, 16~19일과 23일에

정부 부처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해수부를 끝으로 19부·5처·18청·7위원회 등 228개 기관 업무보고는 마무리된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기간 민생·경제·사법·외교·안보 등 국정 전반을 점검하고, 세세한 것까지 지시를 내렸다. 실제로 ‘탈모약 건강보험 적용’ 등과 같은 생활 속 공약도 언급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생중계 방식은 논란도 불러왔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고, 대통령에게 공공기관장이 공개 질타를 당한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생중계 업무보고의 책임은 이 대통령이 모두 짊어지고 있다는 게 정치권의 평가다. 이 대통령은 우추항공청 발사 예산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 도입, 국제청 체납관리단 인력 확대, 범죄수익 환수 문제, 탈모약 건강보험 등 여러 이슈에 대해 공개 지시를 했다.

생중계로 이뤄진 이 대통령의 각종 지시는 일종의 ‘공개 약속’이라는 성격을 갖게 됐다. 각 부처가 이 대통령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그리고 대통령실과 이 대통령이 이를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국민들이 지켜볼 것이라는 의미다.

대통령실은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나온 지시 사항을 중심으로 후속 관리·점검을 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의 ‘공개 약속’이 돼버린, 지시 사항 이행 여부가 국정 평가의 주요인이 될 것이라서다.

한편 이날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6개월 후 생중계 업무보고 재추진 등을 언급하며 공직사회를 긴장시킨 이 대통령은 마지막엔 칭찬을 곁들였다. 이 대통령은 “오해가 있는데, (제가) 말이 없으면 잘한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지적한다”면서 “제 아내가 ‘잘한 걸 칭찬을 자꾸 해야지 문제 있는 것만 지적하면 되냐’고 야단치는데, 잘한 걸 칭찬하려면 너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쿠팡 연석 청문회에 외교통일위원회도 참석

참석 상임위, 5곳 → 6곳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중심의 쿠팡 연석 청문회에 외교통일위원회도 참여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이날 국회 과방위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한 연석 청문회 실시 계획안을 채택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연석 청문회에 참석하는 상임위를 기존 5곳에서 6곳으로 확대했다고 전했다. 이에 연석 청문회는 기존 국회 과방위원회와 정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기획재정·국토교통위원회에 외교통일위원회까지

합세하게 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이 ‘연석 청문회는 정무위원회가 해야 한다’는 주장에 김 원내대변인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무위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연관성이 작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국민의힘 위원장이 이에 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 또한 듣지 못하였으므로 쿠팡과 관련한 여러 사안에 대한 의혹 규명을 위해 연석 회의 방식으로 이틀간 청문회를 실시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예진 기자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와
대법원장의 판사 임명규정 삭제
‘재판 중인 사건 예외’ 내용 추가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내란재판부 법관 추천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을 삭제하고 법원 사무분담위원회 등을 통해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강제 종료하고 재석의원 179명 중 찬성 175명, 반대 2명, 기권 2명으로 법안을 의결했다.

이번 내란재판부법 수정안은 위헌 소지가 제기된 전담재판부 후보추천위원회를 삭제하고, 기존 판사회의와 사무분담위원회 의결로 재판부를 꾸리도록 한 것이 골자다.

민주당은 당초 내란재판부 판사 구성을 전국법관대표회의·판사회의를 통해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여기서 추천된 인물 중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하지만 외부 인사가 추천위에서 추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설치 관련 법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권을 갖도록 한 기존 안을 두고 위헌 시비가 일자 이 같은 방향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 또 당초 안에 있었던 대법원장의 판사 임명 규정도 삭제해, 조희대 대법원장 관여 여지를 없앴다.

아울러 내란재판부를 1심부터 도입하는 대신 부칙에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을 추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산 동구 해양수산부 청사에서 열린 개청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해수부 이전, 국토 균형발전·부산 도약 중대한 계기될 것”

李 대통령, 부산서 국무회의 주재
“경제·산업·물류 중심 발돋움 지원
후임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인재로”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완료한 데 대해 “정부는 부산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 경제·산업·물류 중심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재정·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 부산이전에 맞춰 국무회의를 부산에서 개최했다. 부산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것은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9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은 대한민국 해양 경제의 중심 도시 부산에서 국무회의를 진행하게 됐다. 오늘 오후에는 해수부 개청식도 예정돼 있다”며 “우리 정부 출범 후에 첫 국무회의에서 제가 해수부를 연내 부산 이전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국민들께 그리고 부산시민들께 그 약속을 지키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쉽지 않은 여건에도 이전을 차질없이 수행해 준 해수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도움을 주신 부산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수부 이전은 국토 균형 발전 그리고 부산 도약의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부산이 대한민국을 넘어 동북아시아의 대표적 인 경제, 산업, 물류 중심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게 재정, 행정 등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중에서도 항만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서비스 제공, 지역 산업 성장 지원을 통해 부산과 동남권을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주인공으로 만들겠다”며 “가덕신공항의 본궤도 안착, 부산의 K-문화, K-관광 인프라 강화도 서두를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부산과 동남권 발전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열쇠라는 자세로 범정부 차원의 역량을 총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23일 ‘내란재판부 설치법’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거대 여당의 이름으로 헌법을 짓밟은 22대 국회”라고 비판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독주 속에서 22대 국회는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입법기관이 아니라, 헌법을 한계를 시험하는 기관이 됐다”고 말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분명한 것은, 오늘 통과된 이 법안의 출발점이 사법 정의가 결코 아니라는 점”이라며 “지난 7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 국면에서 지지층 결집을 목적으로 박찬대 의원이 발의했던 정치적 법안이 그 시작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나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의 엉망 기각 등 사법부 판단이 민주당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자, 이 법안은 ‘사법개혁’이라는 이름을 빌려 사법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급격히 변질됐다”며 “사법부 판단에 대한 불만을 입법으로 되갚으려는 시도가 끝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태홍 기자 pth7285@